

2027년도 제76기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2 교 시

- 일반(필수·선택) -

목 차

【경 찰 학】(필수)		1
【범 죄 학】(필수)		10
【행 정 법】(선택)		18
【행 정 학】(선택)		25
【민 법 총 칙】(선택)		31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 찰 대 학

1. 경찰개념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시기상 그 순서가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독일 「제국경찰법」에서는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가행정을 경찰이라고 하였다.
- ②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에서는 자치제 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 ③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은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통해 경찰의 직무가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 ④ 「프로이센 일반관트법」이 제정되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라고 하였다.

2.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개념의 비교와 관련하여, 각 기준에 따른 내용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 준	대륙법계	영미법계
① 개념의 형성	경찰이란 무엇인가	경찰활동이란 무엇인가
② 경찰권의 근거(기초)	일반통치권	자치권
③ 중시하는 수단	권력적 수단	비권력적 수단
④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	수평적·상호협력 동반자 관계	대립적 관계

3. 경찰 분류에 관한 설명 중 구분기준을 토대로 A, B, C에 들어갈 용어가 적절한 것은?

- 가. (A) 경찰: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으로 구분한다. - 강제력을 수단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집행을 주로 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 나. (B) 경찰: 경찰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구분한다. -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수행되지 않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행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 다. (C) 경찰: 경찰의 목적·임무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 범죄의 수사·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 ① A: 봉사 B: 보안 C: 행정
- ② A: 봉사 B: 협의의 행정 C: 행정
- ③ A: 질서 B: 협의의 행정 C: 사법
- ④ A: 질서 B: 보안 C: 사법

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③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제외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④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장은 법정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경찰은 외국의 원수에 대해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특권 및 면제 등으로 인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다. 다만, 외교사절단에 대해서는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 ③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④ 국회 경위와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는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6. 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② 민주주의 이념은 국가조직과 국민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조직구성원 상호관계에서도 중요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이의 적절한 권한 분배 및 경찰관의 민주주의 의식 확립 등은 경찰의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대내적 방안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경찰의 대외적 민주화 방안이다.
- ③ 경영주의 이념은 국민만족을 넘어 국민감동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권력작용보다는 서비스 경찰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실현방안으로는 성과급 제도,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제도 등이 있다.
- ④ 경찰의 이념 중 인권존중주의는 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헌법상 기본권 조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7. 저항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저항권은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헌법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비상적인 헌법보호수단의 성격을 가진다.
- ② 저항권은 공동체에서 용인된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도 악법에 의한 불법을 막을 길이 없을 때 최후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 ③ 경찰이 악법에 대하여 법실증주의적 관점을 가지면, 악법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어느 정도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 ④ 법이 공동체의 객관적 윤리질서에 위배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제도적 채널을 통한 해결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경찰은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현실적인 법에 근거하여 법을 집행하여야 한다.

8.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윤리강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강령을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미흡하다.
- ② 경찰윤리강령은 직원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제정하여 하달되기 때문에 냉소주의를 야기한다.
- ③ 경찰관이 최선을 다해 헌신과 봉사를 하고자 해도 경찰윤리강령에 포함된 정도로만 근무하여 경찰윤리강령이 근무 수행의 최소기준이 된다.
- ④ 경찰윤리강령은 행위 측면의 규정을 도외시하여, 행위 이전의 의도나 동기에 치중하게 된다.

9.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신청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③ 공무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경찰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 1970)의 부패 분류 중 회색부패는 이론상 일탈행위로 규정될 수 있지만 엘리트와 일반시민 모두가 용인하거나 심지어 정당화할 수 있는 부패로서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를 의미한다.
- 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대해 델라트르(Delattre)는 대부분의 경찰관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이며 경찰관의 지성에 대해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 다. ‘Dirty Harry’는 선한 목적을 위한 부정한 수단의 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딜레마적 상황을 의미한다.
- 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도덕적 가치관이 붕괴되어 동료의 부패를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1.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제프리(Jeffery)는 범죄예방모델로 범죄억제모델, 사회복귀모델, 사회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통제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세가지 모델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 나. 브랜팅햄(Brantingham)의 범죄패턴이론은 범죄에는 여가활동장소, 이동경로, 이동수단 등 일정한 장소적 패턴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범행지역의 예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다. 코헨과 펠슨(Cohen & Felson)의 일상활동이론에 의하면 범죄자가 범행을 결정하는 4가지 요소는 대상의 가치(Value), 이동의 용의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보호자의 부재(Absence)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라. 브랜팅햄과 파우스트(Brantingham & Faust)의 범죄예방모델 중 3차적 범죄예방은 대부분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경찰학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역사적 접근방법은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적 연속성을 전제로 하여 경찰현상을 연구하는 접근방법이다.
- ②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체제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연구대상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전체를 미시적으로 보며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 간의 상호기능적 관계를 밝혀주는 접근방법이다.
- ③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경찰활동을 과학화하기 위해서 인간 행태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가치판단적 요소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실판단적 요소만으로 경찰행태를 규명하는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 ④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경찰활동을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고 경찰활동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13. 갑오경장 이후의 경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창설된 경무청의 장인 경무사는 경찰사무와 감옥사무를 총괄하였고 범죄인을 체포·수사하여 법사(法司)에 이송하였다.
- ② 「행정경찰장정」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제정되었다.
- ③ 1900년 「경부관제」에 의한 경부시기에는 지방 각 관찰부에 총순을 파견하여 관찰사를 보좌하며 치안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 ④ 1908년 「경찰사무에 관한 칙령」을 통해 한국의 경찰사무를 완전히 일본에 위탁하게 된다.

14. 경찰청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가장 오래된 것부터 적절히 나열한 것은?

- 가. 해양경찰청의 해양수산부로 이관
- 나. 경찰서에 청문관제 도입
- 다. 경찰서비스헌장 제정
- 라. 제주도 자치경찰 출범
- 마.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 ① 가-다-나-마-라
- ② 다-가-라-나-마
- ③ 가-나-다-라-마
- ④ 나-마-가-다-라

15. 미국 경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영국경찰제도의 영향으로 보안관(Sheriff)과 치안관(Constable), 야경인(Watchman)제도를 도입하였다.
- 나. 19세기 영국경찰은 엄격성·공정성을 유지하며,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웠으나, 미국경찰은 비전문성·부패·비능률이 지배하고 있었으며, 지나친 지방분권화로 인한 지역사회 유착으로 효과적인 범죄대처가 불가능하였다.
- 다. 1960년대 인권운동의 영향으로 경찰업무의 집행에 있어 범죄대응의 효율성보다는 인권보장에 중점을 두어 적법절차를 강조하는데, 이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립되었다.
- 라. 볼머(Vollmer)는 경찰교육훈련의 일부로서 대학 교육훈련을 제도화하였고, 경찰관 선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능·정신질환·신경학 검사를 도입하였다.
- 마. 윌슨(Wilson)은 도보순찰을 1인 자동차 순찰로 대체해 순찰범위를 최대화하여야 한다고 믿었고, 경찰관서 효과성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서 서비스 요청에 대한 신속 대응을 주장하였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상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 나.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필요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경우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 마.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경찰공무원법」상 근속승진을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A, B, C, D에 들어갈 숫자로 적절한 것은? (대통령령에 따른 기간 단축 사유 없음)

- 가.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A)년 이상 근속자

나.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B)년 이상 근속자

다.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C)년 6개월 이상 근속자

라.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D)년 이상 근속자

- ① A: 3 B: 3 C: 4 D: 6
- ② A: 3 B: 4 C: 4 D: 6
- ③ A: 4 B: 5 C: 5 D: 8
- ④ A: 4 B: 5 C: 6 D: 8

18.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 ②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 ③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감봉 및 견책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1회 저지른 경우
- ④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19.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상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직장훈련”이란 경찰기관의 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 ②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과정과 그 대상·기간·방법 등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③ 경찰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시작 10일 전까지 교육훈련 대상자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생활기록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하고, 해당 교육훈련 대상자가 소속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0.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공무원은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이 금지된다. 단,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는 허용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청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중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1.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집행의 절차 중 계고의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명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행정대집행법」의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는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등의 공표와 관련하여 행정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정하여,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초국가범죄 등 국제공조가 필요한 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소재수사,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하여 체포영장·구속영장 또는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람이 국외에 있어 그 사람을 추적·검거 및 송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다. 국외 실종자의 소재 확인 또는 국외 사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라. 국외 테러, 전쟁, 외국에서 발생한 재해·재난 상황에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소재 확인 또는 신속한 구조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 마. 납치·감금 또는 자살 우려 등으로부터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소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3. 「행정조사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 ②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전화·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 ④ 조사대상자는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출석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24.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사실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규정된 출석 요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 나.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 다. 사고로 인한 보호자 확인
- 라. 고소사건 처리를 위한 사실의 확인
- 마.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5.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6.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무기에는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산탄총·유탄 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이 포함된다.
- 나. 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 라. 경찰관은 인질범의 체포 또는 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거나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 마.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폐기대상인 위해성 경찰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된 위해성 경찰장비를 개조할 수 있으며,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조요청을 거절한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③ 경찰관은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할 수 있다.
- ④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최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8.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

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나. 국가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다.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한다.
- 라.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 마.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9. 조직편성원리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조정과 통합의 원리는 조직의 목표달성 과정에서 여러 단위간의 충돌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질서 정연한 행동통일을 가하는 원리로서, 관리자의 리더십을 강화하거나 위원회제도 등을 활용하여 조직단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고될 수 있다.
- 나. 통솔범위의 원리는 한 사람의 관리자가 조직구성원을 몇 명 정도 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원리로서, 부하의 능력과 의욕, 경험 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축소된다고 할 수 있다.
- 다. 수사나 사고처리 및 범죄예방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수행에서 결단과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데, 이때 둘 이상의 상관으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게 되면 업무수행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령통일의 원리가 필요하다.
- 라. 계층제 원리란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는 수직분업의 일종으로서 통솔범위가 넓어지면 계층의 수도 많아지고, 통솔범위가 좁아지면 계층의 수도 줄어든다.
- 마. 분업의 원리는 다수가 일을 함에 있어서 각자의 임무를 나누어서 분명하게 부과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0. 「국가재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

가?

- 가.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나.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라.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마.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1. 「보안업무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정보원장은 보안 업무와 관련하여 보안 업무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보안 업무 수행 인력의 양성 지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 ③ 국가정보원장은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거나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및 항공기·선박 등 중요 장비를 각각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누설될 경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경제안보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은 II급비밀로 구분한다.

3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구제절차를 유족이 수행한다.
- ②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 ③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④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3.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규정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인권침해”란 경찰관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경찰청 인권위원회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경찰의 제도·정책·관행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 다. 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 라. 교육기관에 입교한 경찰관등에 대한 인권교육은 보수·직무교육 등 교육과정 중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마. 경찰청장은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해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인권침해의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 나. 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 또는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상담위탁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사회봉사·수감명령은 5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조

업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③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 나.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 라. 위 (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마.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7.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본 법률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지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③ 본 법률에 따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60일간 공개한다.

38.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 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어린이의 부모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라.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한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마.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9.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퇴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 ②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영주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된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④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사람을 즉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다만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총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40.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착근무”란 사무실을 제외한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지휘선상 위치 근무”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일반요원”이란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등으로 비상소집 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할 사람을 말한다.
- ④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을 판단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을호 비상인 경우에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1. 범죄학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베카리아(Beccaria)와 벤담(Bentham)은 고전주의 학파를 대표하는 학자로, 이들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제지하기 위해 필요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주장한다.
- ② 실증주의 학파는 인간행위를 연구함에 있어 구체적인 증거와 논의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과학적 방법론을 강조한다.
- ③ 최근 범죄학 연구에서는 여러 이론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새로운 경향이 등장했다.
- ④ 셀린(Sellin)은 현대사회는 사회통합력이 약화되어 구성원의 감정 억제력이 상실되고 무규범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데 이런 상태가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2. 다음의 범죄학 이론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1>과 <보기 2>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 설문조사나 실험, 관찰 등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지지되는 것은 (가)의 기준에서는 좋은 이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현재의 범죄학 학문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 범죄자가 생물학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가정에서의 사회화가 범죄의 근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나)의 기준에서는 좋은 이론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 낙인이론은 비판적 평가도 있지만, 범죄의 원인이 처벌임에 주목하여 형사사법기관의 처벌과 관련한 다양한 제언을 함으로써 (다)의 기준에서는 좋은 이론이라 평가할 수 있다.

<보기 2>

㉠ 논리적 일관성	㉡ 정책적 함의	㉢ 경험적 타당성
-----------	----------	-----------

	가	나	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3. 범죄학의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과학적 인과관계는 상관관계의 존재,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앞서는 시간적 순서, 다른 가능한 설명변수들이 통제될 것을 충족시켜야 한다.
- 나. 과학적 연구에서 구체적인 측정은 ‘개념화→조작적 정의→개념적 정의→현실에서의 측정’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 다. 분석단위(Units of Analysis)는 연구대상으로 무엇을 또는 누구를 연구할지에 관한 개념으로 개인, 집단, 조직, 사회적 가공물 등으로 구분된다.
- 라. 전국범죄피해조사(NCVS)의 단일 조사는 주어진 한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범죄피해를 입었는지를 측정하는 기술적 횡단연구로 볼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연구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 ㉡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와의 주어진 정보 사이를 연상할 수 없을 때 연구대상자는 (㉠)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도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지워진 상태로 비공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 (㉡)은 연구자가 정보를 특정인의 신원과 연결시킬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	㉡
①	익명성	기밀성
②	기밀성	법적 책임성
③	기밀성	익명성
④	익명성	법적 책임성

5.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비(Toby)는 기성 사회에 대한 순응 이해관계(stake in conformity)가 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② 레클리스(Reckless)의 봉쇄이론에서 내적 봉쇄는 건전한 자아 및 강한 양심을, 외적 봉쇄는 외부의 감독 및 통제를 의미하며, 이 이론에 따르면 둘 중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작용한다면 비행은 예방할 수 있다.
- ③ 사람은 본성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전제하며, “대부분의 사람은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탐구한다.
- ④ 나이(Nye)는 지나친 통제는 오히려 비행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통제와 비행 간의 관계는 선형관계라고 주장하였다.

6. 신고전주의 범죄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마틴슨(Martinson)의 범죄자 교화에 대한 비판은 신고전주의 범죄학의 등장에 영향을 미쳤다.
- ② 범죄자의 연령이나 정신상태 등 개별적 특성이 처벌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 ③ 고전주의 범죄학의 인간본성에 대한 기본전제인 자유의사와 합리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 ④ 범죄자의 자유의사를 강조했던 고전주의 범죄학과 달리 결정론적 관점을 일부 수용하였다.

7.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에 영향을 미친 학자와 그 설명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가. “사회는 범죄를 예비하고, 범죄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였다.
나. ‘사회학의 아버지’라 불리며 사회현상에 관한 탐구를 ‘사회물리학’이라고 명명하였다.
다. 범죄의 발생을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았으며, 범죄의 발생은 사회의 규범의식 확립 및 사회변혁에 기여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	(나)	(다)
①	뒤르켐(Durkheim)	게리(Guerry)	케틀레(Quetlet)
②	케틀레(Quetlet)	콩트(Comte)	게리(Guerry)
③	케틀레(Quetlet)	콩트(Comte)	뒤르켐(Durkheim)
④	케틀레(Quetlet)	게리(Guerry)	뒤르켐(Durkheim)

8. 이탈리아 실증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로팔로(Garofalo)는 고링(Goring)의 주장을 비판하며 낮은 지능과 타인에 대한 연민의식의 결여가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 ② 롬브로소(Lombroso)에 따르면, 생래적 범죄자와 정신이상 범죄자는 공통적으로 격세유전의 영향을 받는다.
- ③ 페리(Ferri)는 롬브로소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Marx)의 유물론과 다윈(Darwin)의 진화론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
- ④ 고링(Goring)은 롬브로소의 생래적 범죄자론을 지지하였으며, 수형자와 일반사회인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범죄성에 있어서 유전의 역할을 주장하였다.

9. 범죄와 유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정책을 통한 범죄문제 해결을 주장했던 덕데일(Dugdale)과 달리 고다드(Goddard)는 우생학적 관점을 지지하였으며 산아제한을 통한 범죄통제를 주장하였다.
- ② XYY염색체 및 클라인펠터 증후군과 같은 성염색체 이상과 범죄행동 간의 통계적 관련성은 범죄성이 유전된다는 것을 지지한다.
- ③ 범죄성이 유전된다면 이란성 쌍생아보다 일란성 쌍생아의 범죄행위 일치율이 높을 것이다.
- ④ 체형과 범죄 간의 관계를 연구한 후튼(Hooton)은 신체적 열등성의 근본적 원인이 유전에 있다고 보았다.

10.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허칭스와 메드닉(Hutchings & Mednick)의 입양아 연구는 범죄성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통제하려고 하였다.
- ② 체형과 범죄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중 일부는 우생학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 ③ 생물사회학적 범죄원인론은 초기의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연구들과 달리 생물학적 특성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 ④ 초기의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은 경험적 관찰의 중요성을 간과하였으며 이는 이후의 생물사회학적 관점의 연구를 통하여 극복되었다.

11. 사회학습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의 범죄일반이론이 계층과 무관하게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것과 달리, 하류계층의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국한된다.
- ② 서덜랜드(Sutherland)는 다른 행동들이 학습을 통해 습득되는 것과 같이 법위반 행위도 학습되는 것이며, 이 학습과정의 결함으로 인해 법위반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 ③ 차별적 강화이론은 모방학습을 통한 일탈행위의 발생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 ④ 차별적 동일시이론은 사람과의 직접적 접촉에 의한 범죄행동의 학습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12. 다음의 상황에서 甲의 비행 동기를 설명하는 범죄학 이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낙후된 지역에 위치한 A고등학교에는 주류사회의 잣대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교사들로 인해 좌절을 경험한 일부 학생들이 반항적인 비행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학교 주변에 뚜렷한 범죄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주로 길거리를 배회하며 또래들을 괴롭히곤 한다.

이 학교에 재학중인 甲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모범적으로 보내며 교사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하지만 甲은 시험 기간 이후 학생들에 대한 통제가 느슨한 틈을 타 ‘학업으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합리화하며 친구들과 음주를 하기도 한다.

- ① 표류이론
- ② 차별적 기회이론
- ③ 비행하위문화이론
- ④ 차별적 접촉이론

13.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가. 사회유대이론은 인간은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라는 뒤르캠(Durkheim)의 사상을 반영한다.

나. 허쉬는 사회유대의 네 가지 요소로서 참여(Involvement), 전념(Commitment), 애착(Attachment), 순응(Conformity)을 제시하였다.

다. 합법적 수단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성공에 대한 전념은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라. 이 관점에서 범죄예방대책으로 적절한 것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개인에게도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	(나)	(다)	(라)
①	O	X	X	O
②	X	O	O	X
③	O	X	X	X
④	X	X	X	O

14. 베커(Becker)의 단계모델 및 사회적 지위로서의 일탈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후드티를 입은 개발도상국 출신의 젊은 남성이 규범을 위반한 적이 없음에도 일탈자로 여겨진다면, 이는 순수 일탈자(pure deviant)로 볼 수 있다.

나. 최초 일탈행위의 원인이 낙인 부여 이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일탈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주지위(master status)라는 개념을 고려할 때, 숨은 일탈자(secret deviant)에게도 낙인의 효과가 발생한다.

라. 개인에게 부여된 일탈자라는 낙인은 사회적 지위로서 기능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터크(Turk)의 범죄화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교도관과 같은 형의 집행자가 범죄화와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
- ② 갈등에서 승리하기 위한 피지배집단의 노력이 현실적일수록 집단 간 갈등은 심화된다.
- ③ 범죄화란 범죄자가 지배집단이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는 형식적인 과정이다.
- ④ 집단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은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위를 추구하는 데 있다.

16. 다음의 건축양식을 제안한 고전주의 범죄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교도소 건축양식은 원형 공간의 중앙에 높은 감시탑을 세우고, 감시탑 바깥의 원둘레를 따라 재소자의 방을 배치하는 것이다. 감시자가 어두운 감시탑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재소자는 감시자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재소자는 자신이 늘 감시받고 있다고 여겨 규율과 감시를 내면화하게 된다.

- ① 범죄자는 쾌락주의적 계산(hedonistic calculus)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 ② 범죄를 실제적 범죄(real offense)와 상상적 범죄(imaginary offense)로 구분하였으며 실제적 범죄에는 사회의 금욕주의적 경향으로 인하여 규정되는 강간 등의 범죄가 포함된다.
- ③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달성하기 위하여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다.
- ④ 형벌이 정확히 부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범죄에 정확히 비례하는 형벌을 균일하게 가할 수 있는 기계적 장치를 구상하였다.

17. 모핏(Moffitt)이 제시한 반사회적 행위의 발달유형과 발현 원인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반사회적 행위의 발달유형

(가) 청소년기 한정형(adolescence-limited) 반사회적 행위

(나) 생애 지속형(life-persistence) 반사회적 행위

<보기 2>

반사회적 행위의 발현 원인

㉠ 생물학적 성숙과 심리적 성숙 간의 격차

㉡ 반사회적 대상으로부터의 일탈행위 모방

㉢ 신경심리학적 취약성과 범죄유발적 환경의 상호작용

- | | (가) | (나) |
|---|-----|-----|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18. 티틀(Tittle)의 통제균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가. 통제 결손(control deficit)이 발생할 경우 약탈적이거나 반항적 행동을 저지를 수 있다.
- 나. 통제 과잉(control surplus)을 경험하는 사람은 복종적 비행을 저지른다.
- 다. 이 이론은 통합이론으로서 아노미이론과 사회통제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 라. 통제비(control ratio)란 잠재적 피해자에 대해 자신이 가하는 통제와 타인이 가하는 통제의 비율을 의미한다.
- 마. 가정구조에 따라 아들과 딸에 가해지는 통제의 성차(gender difference)에 주목한다.

- ① 가, 나, 라, 마
- ② 가, 다, 라
- ③ 가, 다
- ④ 나, 다

19. 범죄학 이론에 대한 다음의 설명에서 ㉠, ㉣, ㉡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 (㉡)은(는) 공통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 또는 집단이 범죄를 규정한다고 여기지만, (㉠)은 개인이 형사사법기관이나 지역공동체 등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범죄자가 되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과 (㉡)은(는) 보다 구조적인 수준에서 집단 간 갈등과 투쟁에 관심을 가진다. 한편, (㉣)은 집단들은 역동적 평형상태(dynamic equilibrium)에 놓여 있다고 보았으나, (㉡)은(는) 권력관계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여기며 범죄문제의 해결은 자본주의 사회의 전복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 | | ㉠ | ㉣ | ㉡ |
|---|----------|------------|------------|
| ① | 낙인이론 | 집단갈등이론 | 마르크스주의 범죄학 |
| ② | 비행상호작용이론 | 집단갈등이론 | 마르크스주의 범죄학 |
| ③ | 낙인이론 | 집단갈등이론 | 좌파 현실주의 |
| ④ | 비행상호작용이론 | 마르크스주의 범죄학 | 좌파 현실주의 |

20. 범죄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1>과 <보기 2>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 (가) 甲은 하류층 가정출신으로 학업성취 압박을 강하게 받아왔다. 그러나 반복적인 실패 끝에 사회가 제시한 성공목표는 수용하면서도 정당한 수단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고 느끼고, 시험문제 유출과 대리과제 제출을 통해 성과를 얻기 시작하였다.
- (나) A지역은 최근 청소년 비행이 급증하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엄격한 처벌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비행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학생들은 서로의 비행기술과 범죄경험을 공유하면서 재범률이 증가하였다.
- (다) 乙은 아버지의 실직, 연인과의 이별, 대학 낙방을 동시에 겪은 뒤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였고, 이를 해소할 합법적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껴 온라인 사기와 폭력적 행동을 시작하였다.
- (라) B지역은 급격한 인구이동 및 주민이질성으로 인해 기존 공동체가 해체되었고 물리적 환경이 황폐화되었다. 이후 청소년비행과 폭력범죄가 증가하였다.

<보기 2>

- ㉠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
- ㉣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
- ㉡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
- ㉢ 쇼와 맥케이(Shaw & Mckay)의 사회해체이론

- | | (가) | (나) | (다) | (라) |
|---|-----|-----|-----|-----|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21.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프로이트(Freud)의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사회적 갈등을 주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 ② 이드(id)의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슈퍼에고(superego)의 미발달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 ③ 의식의 영역에는 이드(id)가 있고, 무의식의 영역에는 에고(ego)와 슈퍼에고(superego)가 있다.

- ④ 남근기에 남자아이는 어머니에게 성적 감정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엘렉트라 콤플렉스(electra complex)라고 하였다.

22. 인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콜버그(Kohlberg)는 사람을 핵심 인성(core personality)과 관계되는 6가지 점진적인 발전의 단계나 수준의 형태로 분류하였다.
 ② 피아제(Piaget)는 아동들에게 놀이와 관련된 규칙들에 대해 질문을 하고 대답을 분석해 도덕성 발달단계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다.
 ③ 범죄자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도덕적 추론(moral reasoning) 능력의 발달이 매우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다.
 ④ 단순히 처벌을 피하거나 이기적 관점에서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법이 사회의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에 비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23. 여성주의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체스니-린드(Chesney-Lind)는 여성들의 범죄과정을 들여다 보면 신체적·성적 폭력의 피해가 여성들을 범죄로 이끄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며 피해와 가해의 모호한 경계가 여성범죄의 특징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폴락(Pollak)은 남성과 여성의 범죄율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여성들은 법에 의해 관대하게 취급되고 대개 사적인 영역에서 범죄를 저질러 잘 들키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감추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다. 매셔르슈미트(Messerschmidt)는 자본주의 사회는 가부장제와 계급갈등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중적인 주변성(double marginality)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여성의 범죄가 남성의 범죄보다 적은지를 설명하였다.
 라. 애들러(Adler)는 여성의 범죄참여 정도가 증가하는 원인을 전통적인 여성역할의 수행을 위해, 그리고 악화된 여성들의 지위 때문이라고 하는 주변화 가설(marginalization hypothesis)을 주장하였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4.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연령단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생애과정에서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로 발전하는 경향은 누적적 지속성(cumulative continuity)이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비행과 이에 대한 사법체계의 개입으로 여러 면에서 소년의 미래가 차단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나. 성인들의 경우에 사회적 연대의 내용과 크기가 범죄행위의 가담여부에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배우자와의 관계, 직업안정성과 전념, 고용주에 대한 의존도, 다른 유사한 요인들이 범죄행위의 가능성을 낮춘다. 이런 요인들을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라고 정의하였다.
 다. 전환점(turning points)은 이미 악화되었거나 단절된 사회유대를 새롭게 복원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고, 대표적인 전환점들로 결혼, 취업, 군입대를 강조하였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5. 살인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표출적 살인(expressive homicide)은 분노·질투 등 정서적 감정이 표출되어 피해자에 대한 살인 그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주로 친밀한 집단에서 감정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나. 대량살인(mass murder)은 살인과 다음 살인 사이에 냉각기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다. 모살(murder)은 사전에 표현되거나 암시적인 살해 의도가 없이 다른 사람을 불법하게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라. 일차적 살인(primary murder)은 범죄자에 의한 사전 계획과 관련되어 있고 피해자에 의해서 촉진되지 않기 때문에 도구적 범죄의 성격을 지닌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6. 테러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가지원형 테러리즘은 특정 민족·집단의 자치·독립을 목표로 한다.
 나. 혁명형 테러리즘은 기존 정치·경제체제 자체의 전복을 목적으로 한다.
 다. 환경보호형 테러리즘은 지구환경을 위협하고 동물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개발론자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감행한다.
 라. 민족주의형 테러리즘은 독재정권들이 국민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소외계층을 압박하며,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하기 위해 테러를 수단으로 사용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7. 환경범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환경침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 ② 환경인자라는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특성이 있다.
- ③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가 피해자에 비해 월등하고 관계 정보 또는 자료를 독점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 ④ 환경침해행위는 그 원인행위의 완만한 진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의 발생 및 인식 시기, 주체를 밝혀내기 용이하다.

28. 약물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마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로 세계 전역에서 생산되어 마리화나, 해시시, 대마유 등의 형태로 가공되어 유통되고 있다.
- ② 약물남용범죄는 행위자가 보통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는 특성이 있고, 상습적·반복적으로 범죄가 행해지며 폭력범죄, 재산범죄를 동반하기도 한다.
- ③ 황금의 초승달지대(Golden Crescent)는 미얀마·라오스·태국의 국경이 접하는 대형분지로 주로 양귀비를 재배해 이를 세계 각국에 공급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 ④ 약물범죄는 불법약물의 사용뿐만 아니라 제조, 판매, 유통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29. 범죄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버제스(Burgess)는 범죄예측과 관련하여 특정항목의 점수를 가중하거나 감점하는 ‘가중실점방식’이라는 조기예측법을 소개하였다.
 나. 범죄예측이 갖추어야 할 요소는 객관성, 타당성, 단순성, 경제성이다.
 다. 교정단계에서 가석방 여부나 그 시기 등을 결정할 때 수용생활 중의 성적뿐만 아니라 사회복귀 후의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대상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예측한다.
 라. 통계적 예측법은 개별 범죄자마다 고유한 특성이나 개인의 편차를 예측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 미래에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오류 부정(false negative)’이라고 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0. 다음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0,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가. 코헨과 펠슨(Cohen & Felson)은 클라크(Clarke)의 VIVA 모델을 확장하여 CRAVED 모델을 제시하였다.
 나. 브랜팅햄과 파우스트(Brantingham & Faust)의 범죄예방모델에 따르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1차적 예방에 해당한다.
 다. 뉴만(Newman)은 방어공간의 구성요소로 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미지 및 환경을 제시하였는데, 이 가운데 영역성을 강조하였다.
 라. 특정 지역의 범죄예방조치가 인접 지역의 범죄까지 감소시키는 현상을 ‘범죄의 전이효과’라고 한다.
 마. 톤리와 패링턴(Tonry & Farrington)의 범죄예방모델 중 ‘발달적 예방’은 개인의 생애 초기 발달과정에 개입하여, 범죄적 성향을 높이는 위험요인(risk factor)을 감소시키고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가)	(나)	(다)	(라)	(마)
①	0	0	X	X	0
②	X	0	0	X	0
③	X	0	X	0	0
④	0	X	0	0	X

31. 각종 유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 ① 선고유예는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 ②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할 수 있으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나 수감을 명할 수 없다.
-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④ 기소유예에 대한 불복제도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이 있다.

32. 양형(量刑)의 합리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양형의 지역간 불균형이나 법관 개인간 편차 등 양형의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양형기준표를 작성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다.
- ② 공판절차를 피고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사실인정 절차와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양형절차로 이원화하자는 '공판절차이분론'이 양형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 ③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④ 판결전 조사제도는 개별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절히 처우할 수 있도록 하는 처우의 개별화에 기여하지만 양형의 합리화에는 역행한다.

33. 형벌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석방은 사법처분의 일환으로 특별예방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내처우 제도이다.
- ② 목적형주의에 따르면 형벌은 과거의 범행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장래의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③ 일반예방주의는 위하를 통한 소극적 일반예방과 규범의식 강화를 통한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구분된다.
- ④ 특별예방주의는 범죄예방의 대상을 범죄인으로 하고 형벌을 통해 범죄인이 다시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4. 단기자유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정시설의 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 ② 단기자유형은 재사회화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범죄학습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③ 단기자유형으로 인하여 전과자로 낙인찍혀 사회 복귀가 오히려 힘들어 질 수 있다.
- ④ 단기자유형의 개선방안으로 벌금형의 활용, 구금제도의 완화, 사회내처우의 확대 등이 제시되고 있다.

35.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원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재사회화라는 공통된 목적을 갖는다고 본다.
- ② 이원주의는 형벌은 책임을 기초로 한 과거행위에 대한 응보이고,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대책으로 양자는 구별된다고 본다.
- ③ 대체주의는 보안처분으로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형벌을 폐지하고 이를 보안처분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④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산입한다.

3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스토킹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37. 「소년법」상 소년 보호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하며,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 ②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③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④ 보호처분으로서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소년부 판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38. 「소년법」상 소년 형사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검사가 소년 피의자에 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받으면 되고 소년 본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②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③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④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19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39. 피해자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멘델존(Mendelsohn)은 피해자의 유책성 정도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유형을 나누며, 영아살해의 영아나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를 ‘책임없는 피해자’로 분류한다.
- ② 헨티히(Hentig)는 피해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유형을 나누며, 심신장애자를 ‘심리적 피해자’로 분류한다.
- ③ 레클리스(Reckless)는 피해자의 도발을 기준으로 피해자 유형을 나누며, 피해자의 도발로 인하여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된 경우를 ‘도발한 피해자’로 분류한다.
- ④ 쉐이퍼(Schafer)는 피해자의 기능적 책임성 정도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유형을 나누며, 마약중독자를 ‘자신에게 피해를 초래한 피해자’로 분류한다.

40.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

- 가. 유엔(UN)은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대면개념(encounter conception), 배상개념(reparative conception), 변환개념(transformative conception)으로 분류하고 있다.
- 나. 양형서클(sentencing circle)은 주로 경미한 사건을 대상으로 형사사법기관에 적절한 양형을 권고하는데 중점을 둔다.
- 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지역사회 등이 함께 회복과정에 참여하는데, 피해자의 참여가 단순히 가해자의 교화개선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 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원상회복과 범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면제되거나 완화될 수는 없다.
- 마. 우리나라의 회복적 사법제도로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제도가 있는데, 검사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에게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신뢰를 주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3. 행정법관계의 특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기본법」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포함)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인정한다.
- ②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③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직권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반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
- ④ 불가변력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행정쟁송수단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2 교 시	행 정 법	일 반
-------	-------	-----

1. 법치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기본법」은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② 법률우위의 원칙은 인권보장 및 민주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권의 발동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③ 법률에서 명령으로 위임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해야 하지만 헌법 제75조에서는 예외적인 포괄적 위임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다.
- ④ 법률유보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말하며, 그 근거가 되는 법은 원칙적으로 법률이지만 법률에 근거한 명령일 수도 있다.

2. 행정상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 ② 귀책사유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행정청이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 ④ 입법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하였다면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가가 이해관계자들

4.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권은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익보호성은 공권 성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담배 구내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
- ③ 종래 공권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반사적 이익화 하는 경향이 있다.
- ④ 「의료법」 제15조가 진료거부금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진료를 받게 되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해당한다.

5.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 ②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③ 「행정기본법」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은 자기완결적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6. 판례에 따를 때 공법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국유일반재산 대부로 납부 고지
나.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행위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 ① 가
- ② 가, 나
- ③ 나, 다
- ④ 가, 나, 다

7.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②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경우 법질서상 당연히무효이나 행정내부적 효력은 인정된다.
- ③ 헌법재판소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하여 법령보충규칙을 인정하고 있다.
- ④ 법령보충규칙은 법령에 의한 수권 없이 독자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8.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 헌법은 헌법적 효력을 지니는 헌법대위적 법규명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②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은 총리령으로 발한다.
- ③ 상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집행명령이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집행명령은 당연히 실효된다.
- ④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9.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는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국민의 권익을 직접 규율하는 법규명령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본다.
- ② 1심법원인 지방법원은 위법한 명령에 대한 사법적 심사권이 없다.
- ③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하여 법규명령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그 명령은 당해 사건에 적용이 거부될 뿐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는 처분적 명령으로 항고소송을 통해 법원이 직접 통제할 수 있다.

10.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는 보호구역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 ③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 ④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행정절차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가. 「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을 변경하는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게 되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나. 교육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적격사유가 없는 총장후보자 A와 B 가운데 A후보자가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대통령에게 총장으로 A후보자를 임용제청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B후보자에게 개별심사항목이나 총장 임용 적격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다.
다. 법령에서 사업의 승인 이전에 관계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가 미리 자문을 구하라는 의미인 경우에는 비록 승인 전에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승인처분이 당연히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① 가(O), 나(O), 다(O)
- ② 가(X), 나(X), 다(O)
- ③ 가(X), 나(O), 다(X)
- ④ 가(X), 나(X), 다(X)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③ 사립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로서 정보공개 의무가 인정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13. 시장 甲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축조한 乙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乙이 이에 응하지 않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의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와 별개로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후 사망한 경우 그 이행강제금의 납부 의무는 乙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 ③ 甲은 이행강제금 대신 행정대집행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④ 甲의 이행강제금 부과 후 乙이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甲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14.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면서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한 후 당해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③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징계양정 결과가 적정하면 해당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 ④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아야 한다.

15. 판례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공급할 택지의 지정
- 나.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
- 다. 문화재발굴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권자의 문화재발굴허가

- ① 가
- ② 다
- ③ 가, 나
- ④ 가, 다

16. 강화상 예외적 승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호텔신축허가
- 나. 「광업법」상 광업허가
- 다. 구 「도시개발법」상 개발행위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 ④ 가, 나, 다

17. 甲은 A학교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어 관할청 B로부터 취임승인을 받았다. 한편 乙은 A학교법인 이사회의 전임 이사로서 甲의 선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B는 A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의 문제점을 보완 및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 ② 甲에 대한 B의 이사취임승인처분은 A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법률행위이다.
- ③ 乙은 취소소송을 통해 甲에 대한 B의 이사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④ 甲에 대한 이사선임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B의 이사취임승인처분이 있더라도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18.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히무효이면, 인가처분에 기초한 수용재결도 무효이다.
- ②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히무효이다.
- ③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친일재산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 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19.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하는 것이므로, 수익적 처분에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부가할 수는 없다.
- ③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④ 기부채납을 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0. 행정행위의 하자 및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 ④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1.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행정지도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갖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 ④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2. 경찰공무원 甲은 내부전산망을 통해 乙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여,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실효된 4건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乙에게 있음을 확인하고도 乙의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甲과 국가의 배상책임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단, 국가배상책임의 다른 요건은 충족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과실은 경과실에 해당하므로 국가만이 배상책임을 진다.
- ② 甲의 과실이 경과실에 해당하여도 국가배상책임 외에 甲도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진다.
- ③ 甲의 과실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책임 외에 甲도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진다.
- ④ 甲의 과실이 중과실에 해당하여도 국가만이 배상책임을 진다.

23.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공유나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의 공고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②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 발생요건인 상호보장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외국인의 국적국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실제로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확인되어야 구비된 것으로 본다.
- ③ 「국가배상법」 제2조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에서 ‘타인’이란 가해자인 공무원 및 그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 이외의 모든 자를 말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인 공무원과 동일한 목적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이상 여기서 말하는 타인에 해당한다.
- ④ 행정청이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입법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행정입법부작위는 부당할 수는 있어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4.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② 무허가건축물이라도 구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면 보상의 대상이 된다.
- ③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이 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 ④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개발이익을 배

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이를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5. 「행정심판법」상의 임시처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심판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임시처분도 심판청구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② 위법·부당의 판단은 본안심리사항이지만 임시처분을 위해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여야 한다.
- ③ 당사자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④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6. 「행정심판법」이 인정하는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취소재결
- ② 변경재결
- ③ 취소명령재결
- ④ 변경명령재결

27. 허가 등 처분을 신청한 甲과 乙은 서로 경원관계에 있다. 행정청은 甲에게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함)을 함과 동시에 乙에게 허가 등 처분을 하였고, 이에 甲은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甲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나. 甲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甲과 乙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의 구비여부와 우열을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甲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乙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 ④ 가, 나, 다

28. 행정소송상의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제3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송참가를 인정한다.
- ②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률상 이익의 침해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행정청의 소송참가에서 참가행정청은 피고행정청을 위해서만 참가할 수 있다.
- ④ 제3자는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소송참가 외에 「민사소송법」 제71조에 의한 보조참가도 할 수 있다.

29. 항고소송에서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전부지승인 후에 원자로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더라도, 사전부지승인은 원자로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지 않는 독립된 처분이므로 사전부지승인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③ 판단대상이 되었던 조례안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또는 폐지되기 전의 조례안의 내용이 사실상 변경된 바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 ④ 고등학교 퇴학처분을 받은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더라도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30.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행정심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②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는 때
- ③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④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31. 행정소송상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입증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 ②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 ③ 처분청은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음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피고인 처분청에 있다.
- ④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경쟁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인 공공기관에 있다.

3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 ②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으면 처분사유의 추가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조차 없는 것이므로, 결국 소송단계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 ③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④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 인하여 처분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내용이 달라진다면, 처분청은 해당 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처분절차를 거쳐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지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법령만 추가·변경할 수는 없다.

33.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 ② ‘처분 등이 있는 날’이란 처분의 효력발생일을 의미하고, 상대방이 있는 처분의 경우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 ③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그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 아니라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

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처분이나 그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받는 신뢰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는 물론이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확대된다.

34.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 ②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집행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일반적·추상적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아니라 당해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말한다.
- ④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처분에서, 당해 압류재산의 공매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그 공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압류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5.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취소판결의 제3자효, 간접강제,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등 처분을 전제로 한 「행정소송법」 규정들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 ②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 ③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한다.
- ④ 당사자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36. 행정상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휘감독 하에 있는 행정기관에 대한 위임을 위탁이라고 한다.
-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③ 권한의 위임과 권한의 대리(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포함)는 법적 근거를 요한다는 점에서 같다.
- ④ 내부위임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 정해야 한다.

37.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 ②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결여된 공무원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본다.
- ③ 임용행위가 구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임용시부터 퇴직시까지의 근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익에 해당한다.
- ④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상실한 자가 그 이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면 당연퇴직 후 사실상의 근무기간도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된다.

38.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색을 위하여 용도가 지정된 경찰건은 공용물에 해당한다.
- ② 집회·시위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공물의 보통사용의 대상이다.
- ③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자연공물은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해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이상 공물로서의 성질을 유지한다.

39. 경찰관직무집행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은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 ③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 ④ 경찰관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0.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도 소청의 대상이 된다.
-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합의제 행정청이다.
- ③ 소청전치주의는 경력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은 원징계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의 내부성 요인으로 정부실패가 발생한다.
- ② 비경합성 및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재는 정부에 의한 공급을 어렵게 만들어 정부실패가 발생한다.
 - ③ 조직 내부특성이나 관리상의 요인으로 생산가능성 곡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X-비효율성으로 정부실패가 발생한다.
 - ④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인 파생적 외부효과가 초래되어 정부실패가 발생한다.

2 교 시

행 정 학

일 반

1. 행정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의 개념은 때와 장소, 또는 학자들의 관점이나 접근방법에 따라 달리 정의되었다.
- ② 최근의 행정이론에서는 행정의 주체가 정부로 한정되지 않고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게 연결된 네트워크의 거버넌스로 확장되었다.
- ③ 행정은 공공성을 지니기에 공공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국민생활의 안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를 강하게 받는다.
- ④ 행정은 적용범위와 관련해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분류할 수 있고, 좁은 의미로는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인간의 협동적인 노력의 한 형태로 정의한다.

2.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과정설에서는 공익에 대해 사익을 초월한 실체·규범·도덕 개념으로 파악한다.
- ②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며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 ③ 롤스(Rawls)는 원초적 상태에서 합리적 인간은 최소극대화(maximin) 원리에 입각해 합리적인 규칙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 ④ 가외성 요소 중 중첩성(overlapping)은 동일한 기능을 두 개 이상의 기관이 독립적인 상태에서 각각 따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에서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목표를 대체하는 공공조직

4.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신제도주의는 비공식적인 제도나 규범을 배제하고 제도를 공식적인 체제나 구조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제도적 접근과 구별된다.
- ② 사이먼(Simon)은 행정학 연구에서 사실과 가치를 구분해 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은 가치중립적인 연구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③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은 정부역할의 확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나 신공공관리론은 과정에 초점을 두지만 뉴거버넌스론은 결과를 강조한다.
-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기업 경영의 논리와 기법을 도입해 행정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정부의 역할도 노점기보다는 방향잡기를 강조한다.

5. 딜레마 유형 중 의사 딜레마(pseudo dilemma)를 옳게 설명한 것만 고른 것은?

- 가. 현재의 문제 상태가 딜레마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딜레마 상황으로 인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 나. 의사결정자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딜레마 상황을 딜레마가 아닌 것으로 인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인지 능력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착오인 경우나 의사결정자가 의도적으로 딜레마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경우에 발생한다.
- 라. 의사결정자가 보유한 가치의 우선순위, 의도, 이해관계, 인지상의 오류 등으로 상황 변화를 무시하거나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딜레마를 딜레마가 아닌 것으로 오해해서 발생한다.

-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6.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개발된 넛지(Nudge)의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넛지는 엄격하게 검증된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강조한다.
- ② 넛지는 기본적으로 간접적이고 유도적인 접근으로 촉매적 정책 수단의 성격을 띠고 있다.
- ③ 넛지는 혁신적 변화가 지속적이고 부단한 소규모 변화의 누적적 결과라는 급진적 점증주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 ④ 넛지는 개인에게 선택의 옵션을 제공하고 특정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이며 개인의 선택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방임주의를 표방한다.

7. 로위(Lowy)의 정책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정책을 성격에 따라 배분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으로 분류하고 있다.
- ② 배분정책에서는 로그롤링(log 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난다.
- ③ 규제정책은 엘리트이론이 적용되며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계급정책으로 부를 수 있다.
- ④ 분류에 활용된 기준이 포괄성과 상호배타성을 충족하고 있어 타당하고 믿을 만한 분류시스템으로 평가된다.

8. 엘리트론과 다원주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헌터(Hunter)는 미국사회의 권력엘리트는 정치, 기업, 군의 주요 지위에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군·기업 복합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 ② 밀즈(Mills)는 명성접근법을 통해 지역사회의 엘리트 지배구조를 분석하면서 지역사회 엘리트들이 강한 응집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며 일반대중들은 비판 없이 이를 수용한다고 했다.
- ③ 벤틀리(Bentley)와 트루만(Truman)은 정책을 다양한 이익집단 간의 경쟁과 조정의 결과물로 간주하나 잠재이익집단과 중복회원이라는 메카니즘에 의해 정책결정이 특수이익에 치우치게 된다고 했다.
- ④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는 엘리트들이 무의사결정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제기조차 되지 못하도록 방치하거나 차단한다고 했다.

9. 정책의제설정의 유형 중 외부주도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 설정을 정부에게 강요하는 경우로서 허쉬만(Hirschman)이 말하는 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

된다.

- ② 정부 내의 정책결정자가 주도하여 정부의제를 만드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정부의 힘이 강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 ③ 정부기관 내의 관료집단이나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에 의하여 주도되어 최고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하여 문제를 정부의제화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④ 국방·외교 등 비밀유지가 필요한 분야, 강한 반대가 예상되더라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하려는 정책, 혹은 권력의 집중화가 심한 국가에서 발견된다.

10. 쓰레기통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의 구성단위나 구성원 사이의 응집성이 아주 약한,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특징을 강조한다.
- ②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상황은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유동적 참여자 등으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매우 제약한다.
- ③ 의사결정은 정책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라는 네 가지 요소가 시간의 경과와 함께 흘러 다니다가 우연히 서로 교차할 때 이루어진다.
- ④ 의사결정 방식 중 하나인 날치기 통과(choice by oversight)는 관련된 문제들이 스스로 다른 의사결정기회를 찾아 떠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11.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형성평가는 정책집행이 끝난 후 정책이 원래 의도한 목적을 적절하게 달성했는지를 평가한다.
- ② 대응성 평가는 사회구성원 간 또는 여러 집단 사이에 비용과 편익이 공평하게 배분되었는가를 평가한다.
- ③ 진실험은 집단구성에 있어 구성원을 무작위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수행하는 실험이다.
- ④ 진실험은 준실험에 비해 외적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차원에서는 우수하나 내적 타당성 차원에서는 준실험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12. 상향적 정책집행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추진의 권한을 하부로 분산하고 일선관료와 정책대상집단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 ② 집행현장의 실상을 그대로 파악하므로 의도하지 않은 효과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가능하다.
- ③ 정책결정 단계가 집행의 성공에 중요함을 일깨워 주며, 목표의 명확화와 법적 구조화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준다.
- ④ 현장의 실제 집행과정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수행하게 하므로 정책집행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13. 정책평가의 타당도 저해요인과 통제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역사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실험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② 회귀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극단적인 측정값을 갖는 집단이나 사람을 실험에서 배제한다.
- ③ 크리밍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효과가 크게 나타날 양호한 집단이나 사람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배정한다.
- ④ 호손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실험대상에게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들이 주목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14. 베버(Weber)의 관료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에서의 모든 직위의 권한과 책임은 법규에 의해 규명되며, 권한은 사람이 아닌 직위에 부여한다.
- ② 권한의 계층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하위계층은 상위계층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③ 관료제 하에서 구성원들은 인간으로서의 감정이나 충동적인 화를 멀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동할 것이 기대된다.
- ④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15.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② 국민권익위원회
-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16. 공직자 윤리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이해충돌 방지 의무,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인사혁신처가 업무를 총괄한다.

다.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은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선발시험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동시적 타당성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성과 근무실적과의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내용타당성은 문제의 수준이 비슷한 동질의 두 개 시험유형을 개발하여 동일집단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게 한 후 집단의 성적 간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구성타당성은 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성과와 임용 이후 근무실적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타당성은 측정도구의 측정결과가 보여주는 일관성을 의미한다.

18. 공무원 인사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 ② 불문경고는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토록 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되는 효력을 가진다.
- ③ 정직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 ④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잃는 것으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된다.

19.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단치는 성과와 보상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 ② 유인가는 보상이 개인의 욕구나 목표를 얼마나 충족시켜 주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 ③ 만족이 성과를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과의 수준이 업무 만족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 ④ 동기부여는 기대치·수단치·유인가를 모두 곱해서 계산한다.

20.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마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이론에서는 5개 계층의 단계에 따라, 욕구가 순차적으로 충족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②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은 생존·관계·성장욕구의 세 단계로 분류하고, 한 계층의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위욕구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 ③ 맥클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은 개인의 욕구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환류와 자율성이 동기부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 ④ 허즈버그(Herzberg)의 2요인이론에서는 욕구충족이 동기부여의 효과를 가져오면 동기요인으로, 단순히 불만예방효과만 가져오면 위생요인으로 구분하였다.

21.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제배분법은 평정의 집중화나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조직단위 간 구성원의 능력이 평등하지 않고 우수한 관료가 몰려 있는 부서가 있다면 강제배분에 의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 ② 행태기준 평정척도법은 서술법에 중요사건기록법을 결합한 방식으로, 평정오류를 줄일 수 있어 평가대상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 ③ 서열법은 평가대상자의 성적을 서로 비교하여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인원이 적은 소규모 조직에서 적용 가능하다.
- ④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평가대상자가 목표설정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 평가에 대한 신뢰가 높고,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

22.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① 직위
- ② 직류
- ③ 직군
- ④ 직렬

23.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 직렬에 장기간 근무함으로 인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 ② 직무의 성격이 다른 직무 간의 수평적 이동이 가능하다.
- ③ 개방형 임용제를 채택함으로 인해 언제 어느 직위든 외부 전문가의 충원이 가능하다.
- ④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으로 직무급 체계 확립에 기여한다.

24. 리더십 이론을 옳게 설명한 것만 고른 것은?

가. 화이트(White)와 리피트(Lippitt)는 사람과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고 낮음에 따라, 팀 관리형·과업형·무관심형·컨트리클럽형·중간형으로 다섯 개의 리더십 유형을 도출하였다.
 나. 피들러(Fiedler)는 리더십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로 리더와 구성원 관계, 과업구조, 그리고 리더의 직위 권력을 제시하였다.
 다. 브룸(Vroom)과 예튼(Yetton)은 리더십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소로 관리의 대상인 부하의 성숙도를 들었다.
 라. 하우스(House)의 경로-목표이론에서는 리더십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소로 과업환경의 특성과 부하의 특성을 들었다.

-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25.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직적 분화가 심한 반면, 수평적 분화는 약하다.
- ② 공식화의 정도가 낮고, 분권화 되어 있다.
- ③ 구성원에게 스트레스와 심리적 갈등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 ④ 애드호크라시 조직유형에는 태스크 포스, 프로젝트 팀, 매트릭스 조직, 네트워크 조직 등이 있다.

26. 조직구조 설계의 상황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페로우(Perrow)는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가능성에 따라 장인·일상적·비일상적·공학적 기술로 유형화하였다.
- ② 비일상적인 기술일수록 분권화가 낮고, 복잡성과 공식화가 높아진다.
- ③ 규모가 커질수록 공식화와 복잡성이 높아지고, 분권화가 촉진된다.
- ④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공식화는 낮고, 복잡성과 분권화는 높아진다.

27. 기관통합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인 동시에 그 밑에 집행위원회나 국·과를 두고 집행기능까지 수행한다.
 나. 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집중되어 민주정치와 책임행정의 구현이 쉽다.
 다.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라. 파벌정치 개입에 의한 정치적 독점이 우려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8.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지위 및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수요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내 종합행정 책임자의 권한을 갖는다.
- ②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총괄하는 집행부의 수장이다.
- ③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대립하는 관계에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단체를 대표하는 최고 집행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 ④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요구할 수 있다.

29. 티부모형(Tiebout Model)의 전제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은 자신의 선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 ②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 사이에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 ③ 모든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와 조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 ④ 소규모의 이질적인 지방정부에 의해 지방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추구한다.

30. 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한다.
- ② 자주재원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지원이 많아지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진다.
- ③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행정수요와 이를 감당하는데 필요한 재정규모와 관련이 된다.
- ④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여 반드시 지방재정이 건전하다고 할 수 없다.

31. 지방재정관리제도 중 사전적 통제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투자심사제도
- ② 중기지방재정제도
- ③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 ④ 지방재정진단제도

32. 쉬크(Schick)가 강조한 예산의 행정적 기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기적인 국가발전 목표와 기본 정책을 구체적인 예산사업으로 연계하여 실행하는 국가 계획기능이다.
- ②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부처의 사업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도록 독려하는 관리적 기능이다.
- ③ 공무원이 예산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게 하고 재정 집행과정에서의 자의적 낭비나 비위를 방지하는 합법적 재정통제기능이다.
- ④ 시장기구가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재화를 생산하고, 조세 및 재정지출을 통해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경제적 분배기능이다.

33. 예산의 원칙에 예외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이용은 한정성의 원칙에 예외가 된다.
- ② 예비비는 통일성의 원칙에 예외가 된다.
- ③ 순계예산은 공개성의 원칙에 예외가 된다.
- ④ 준예산은 명료성의 원칙에 예외가 된다.

34.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정교부금제도
- ② 성인지 예산결산제도
- ③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 ④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

35. 헌법에 규정된 국가 재정 및 예산 관련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기채동의권을 규정하고 있다.
- ④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차기 국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예비비 지출 승인권을 규정하고 있다.

36. 조세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지만 비과세·감면을 통해 세수 확충을 위한 정책 자료로서의 중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조세지출은 숨겨진 보조금 성격을 띠므로 예산서에 명시되면 개방화된 자유무역 환경 하에서는 무역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 ③ 방만하게 운영되기 쉬운 조세감면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역을 기능별·세목별 예산구조로 시각화하여 확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④ 조세감면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재정손실과 특혜성 지원 내역을 국회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감독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37. 예산집행의 신축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체는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책임 소관이 변경되어도 사용 목적과 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 ② 이월은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넘겨서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기적 신축성을 유지해 준다.
- ③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 도를 요구하는 공사·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 의결 없이 지출할 수 있는 경비이다.
- ④ 예비비는 예산편성 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기존의 예산편성시에 인지할 수 없는 부분에 활용되고 있다.

38. 통합예산의 주요 내용을 옳게 설명한 것만 고른 것은?

- 가. 정부의 재정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파악하는 예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포함되지만, 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세계 각국은 IMF의 권고에 따라 매년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각국 재정운용 결과의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해졌다.

다. 재정운용에 따른 금융거래를 금융기관, 기타 민간, 해외 등 경제 부문별로 구분·파악은 되지만, 재정부문이 통화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는 없다.

라. 국가 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지수의 파악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39. 행정통제의 유형 중 내부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헌법기관이 공무원의 직무감찰과 회계검사를 수행하는 통제방식이다.
- ② 시민사회의 다양한 사적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여론을 형성하고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통제방식이다.
- ③ 공직자 개인이 내면화한 공공봉사정신, 책무성,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양심과 전문적 양식에 의존하여 자신을 규제하는 통제방식이다.
- ④ 부처 내 상급 관리자나 기획부서가 국정과제 및 기관목표 달성을 위해 하위 집행부서의 예산집행과 업무과정을 감독하는 통제방식이다.

40. 행정개혁의 구조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행정기능의 중복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조직을 재설계하거나 기관의 통폐합을 단행하는 변화를 의미한다.
- ② 개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지닌 보수적 관행을 타파하고 공공 봉사자로서 공직윤리와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인간의 행태변화를 의미한다.
- ③ 바람직한 미래상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 전략 아래에 절차나 과정·기술·장비의 개혁을 통하여 행정 성과의 향상을 도모한다.
- ④ 정기적인 예산 주기나 순환 보직제 등 기존 법령과 제도적 틀 내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공무원의 정원관리 및 통상적인 인력 재배치 활동을 의미한다.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관습법은 제정법에 대하여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 ② 법원(法院)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 ③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法院)은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④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2.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 의할 경우, 계약해제권의 법적 성질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배권
- ② 청구권
- ③ 형성권
- ④ 항변권

3.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통상의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신의칙을 근거로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4. 甲이 X토지의 소유자인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의 상공을 통과하는 송전선을 설치하였다. 이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농지로 사용하다가 그 취득 후 1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甲을 상대로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丙이 X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이 통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X토지를 매수한 경우, 丙의 철거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② 법원은 甲의 주장이 없더라도 丙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③ 丙의 권리행사에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토지소유자인 乙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 ④ 丙의 철거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5. 의사무능력자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용금을 전부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과 乙이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 ㄴ. 甲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위 계약으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乙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ㄷ. 甲이 수령한 차용금을 전부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그 이익이 현존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6. 미성년자 甲과 그의 법정대리인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에 관한 허락을 한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② 乙이 甲에게 범위를 정하여 하는 재산처분의 허락은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 ③ 甲이 乙의 동의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 乙은 甲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甲이 乙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노트북에 관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미성년인 상태에서 丙에게 매매대금의 이행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7.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② 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
- ③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④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더라도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8.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생사불명을 이유로 법원에 의해 개임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라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졌다면 그 효력이 없다.

9.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으로 기재된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 ②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③ 실종선고가 이미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실종선고가 취소됨이 없이 다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새로이 선고된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으로 간주된 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으로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룰 수는 없다.

10. 甲을 포함한 10인이 부산에 주소가 있는 甲을 대표이사로 하여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사단법인 A를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A의 설립을 위하여 작성한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다.
- ② A는 甲의 주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A의 설립등기시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 ④ 甲이 A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乙에게 한 불법행위가 A설립 후의 대표이사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설립 후의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11. 甲은 「민법」상 재단법인 A의 설립을 위해 생전처분으로 X건물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고, 이에 터잡아 A가 설립되어 그 설립등기가 마쳐졌지만, 아직 A명의로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과 A의 관계에서 X건물의 소유권은 A의 설립등기와 관계 없이 甲이 출연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A에게 귀속한다.
 - ㄴ. 甲은 A가 성립한 이후에는 X건물의 출연행위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ㄷ. 甲이 선의의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A는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④ ㄱ, ㄴ, ㄷ

12.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②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그 정관에 정함이 있는 때에는 상속될 수 있다.
- ③ 정관에서 대표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 ④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1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재단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의 과반수로서 법인을 대표한다.
- ③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 ④ 청산 중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로 인한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면한다.

14. 비법인사단 A와 그 대표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A가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이 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이다.
- ② 甲이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乙과 거래행위를 한 경우, 乙이 그 대표권 제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 ③ 甲으로부터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丙이 A를 대표하여 한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치지 않는다.
- ④ 甲이 그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는 丁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5.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 법정과실이다.
-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부동산은 독립한 물건이라도 종물이 될 수 없다.
- ④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16.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권양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이다.
- ②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다.

- ③ 대리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17. 강행규정인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에게 중개를 의뢰한 사람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 ②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행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
- ③ 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
- ④ 문화재 수리업자의 명의대여계약

18.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나 아직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이다. 위 사실을 잘 알고 있는 丙은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과 丙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ㄴ. 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직접 丙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丁이 丙을 소유권자라고 믿고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丁은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② 계약의 피해 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 ④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불공정성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도 무효이다.

20.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규정한 「민법」 제107조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적용된다.
- ②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사실은 의사표시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③ 강박에 의해 증여를 한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의 의사가 있더라도 그 증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된다.
- ④ 대리권이 남용되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동조 제2항도 유추적용된다.

21.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허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있어 대주(貸主)의 지위를 이 전받은 자
- ㄴ. 허위로 체결된 전세권 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 ㄷ. 허위의 선급금 반환채무 부담행위에 기하여 그 채무를 보증하고 이행까지 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

-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22. 甲은 A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乙에게 가장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乙이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한 후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丙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③ 허위표시에 대하여 丙이 선의이면 그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甲은 丙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 ④ 허위표시에 대하여 丙이 악의이면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丁이 선의이더라도 甲은 丁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2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

-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④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로 화해계약을 체결한 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2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
- ②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③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 ④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그 법률행위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2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의사표시 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무효이다.
- ③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 ④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26.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 ②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 ③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임의대리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27.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대리권 수여 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ㄴ. 乙이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 채무는 소멸한다.
- ㄷ. 丙이 乙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28.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대방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하고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29.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甲이 매매계약을 추인하지 않는 경우, 丙은 계약체결 당시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이 매매계약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하였더라도 丙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 ④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乙은 과실이 없으므로 丙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이다.
- ②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③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이다.
- ④ 매매에 의한 소유권 상실은 권리의 상대적 소멸에 해당한다.

31.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되지는 않는다.
-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③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32.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된다.
- ② 매도인에 의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③ 취소한 법률행위는 주인에 의하여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지만,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무효인 법률행위의 주인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다.
- ④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3.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은 때부터 유효가 된다.
- ② 乙은 甲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甲이 乙로부터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만약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면, 甲에게 그 무효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甲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4.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 ②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한다.
- ③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조건이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 ④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35. 법률행위의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 ②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 ③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 ④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6.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시, 분, 초를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은 즉시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그 기간이 끝나는 때가 만료점이 된다.
- ② 당사자가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 것으로 약정하면 그 약정이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우선한다.
- ③ 계약기간의 기산점을 2026. 6. 24.부터 기산하여 주(週)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 ④ '선거일 전 3년간 사이'란 선거일 전날 24시를 기산점으로 하고 소급하여 3년간 사이를 의미한다.

37.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 내에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 ②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한다.
-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④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8.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시점은 가압류의 명령이 채무자에게 고지된 때이다.
- ②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 ③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④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39.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②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③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행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 ④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

40.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원고가 제기한 소에 피고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시효중단을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지급명령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 ③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최고 시에 발생한다.
- ④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